

노인보건복지 정책

조진희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

1.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0년대 6명에서 1980~1990년대 급격히 하락하여 2004년 1.16명으로 사상 최저
 - 노인인구는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6년 초고령화 사회, 1950년 세계 최고 고령국가에 도달할 전망
 - 고령인구비율 : 7.2%(2000년) → 14.3%(2018년) → 20.8%(2026년)
 -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4% 미만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20% 미만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ultra-aged society) 구분(UN분류)
 - 농촌지역 중 일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 시급
 - ※ 남해(25.8%), 의령(25.7%), 의성(25.2%), 군위(25.0%), 고흥(24.9%), 꼽성(24.6%) 등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1970	1980	1990	2000	2006	2010	2020	2030	205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8,497	49,220	49,956	49,329	42,348
65세+	991	1,456	2,185	3,395	4,597	5,354	7,821	11,889	15,793
구성비(%)	3.1	3.8	5.1	7.2	9.5	10.9	15.7	24.1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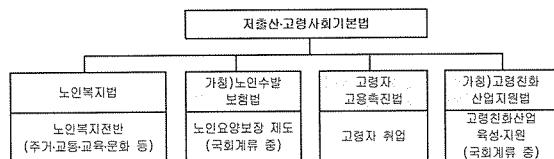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자료(2005. 1)

<주요국가의 인구고령화 속도>				
	도달 연도			소요 년 수 7% → 14% 14% → 20%
	7%	14%	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자료(2005. 1)

2.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범정부적으로 고령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추진(2005. 5. 18일 공포, 2005. 9. 1일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 실행계획 등을 심의할 국가위원회 구성
- 인구정책과 출산, 일자리와 소득보장, 건강과 요양보장, 고용정책과 노인인력, 평생교육, 여가 및 문화, 고령친화산업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의 기획, 조정 등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법령체계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법령체계도



- 범정부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등 수립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시안 마련
 - 미래사회 국가 비전·전략 제시 및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경제 전반의 대책 마련
 - 노후소득보장, 노인수발보험 기반조성, 노인주거·교통편의 증진, 연령차별금지 및 정년연장,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성공적인 노후생활기반 마련 등
- ※ 저출산고령대책 연석회의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서 논의·결정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2006년도 세부 실천계획 수립
- 2007년 본격적인 평가를 대비한 평가지표 및 평가지침 마련
 -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중앙 및 지자체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정책 참여기반 확대 및 홍보전략 수립
- 시민단체·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민·관 협력사업 추진
 - ※ PCRM 등 연락망 구축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 교환 및 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의 지속적 관심 유도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전략 개발·실행

3. 노인보건복지 정책

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강화

1) 노후소득 보장 현황

- 경제적인 생활실태 및 노후생활 준비(2004년 노인생활실태조사 결과)
 - 노후생활 준비를 한 노인의 비율은 28.3%로 낮은 수준

- 노후생활 준비수단은 공적연금(67.2%), 저축(38.3%), 부동산(19.7%) 순임
- 이상적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국가(40.9%), 스스로 마련(40.2%), 가족과 자녀(18.7%) 순으로 노후생활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짐
 - ※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교통수당, 경로연금, 기초생계비, 공적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기대를 의미
- 전체노인 중 공적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 약 30% 수준

구 분	총 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치상위)
수급자수	1,336천명 (30%)	579천명 (13.2%)	137천명 (3.1%)	404천명 (8.7%)	221천명 (4.8%)
월평균 수령액	-	35만원	170만6천원	35만8천원	3만5천~5만원

□ 노인취업 실태

-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가 취업(30.8%)하고 있거나, 비취업 노인이 취업하기를 희망(17.5%)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희망 노인 54만명(11.8%), 금년 정부지원 일자리 수 8만개

2)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강화

- 국민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
 -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가 확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정립
 - 적정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 보험료 부과체계 현실화 및 보험료 납부자 확대를 통해 연금 수혜자 확대
 - 농어촌 연금보험료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농어촌 주민의 노후소득 보장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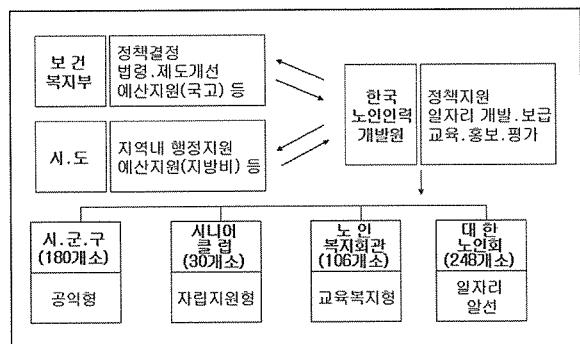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자와 1933. 7월 이전 출생(72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5천원~5만원 경로연금 지급
- 경로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 저소득 노인의 경로연금 수급연령(72세 → 65세)변경은 국민연금법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 노인자산소득 증대
 - 60세 이상 노인의 3천만원 이하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노후생활보장제도(역모기지론) 등 개인적 노후 소득 보장 수단 마련을 위한 상품개발 지원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2009년까지 어르신일자리 14만개 확대
 - 인건비 등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2005년 35 천개 → 2006년 80천개)
 - ※ 대한노인회 등을 통한 취업알선·공동생산 일자리 (2005. 65천개 → 2006. 100천개)
 - 중앙과 지방을 연계·지원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운영

일자리 확장 노인수	2006년 일자리 지원	2009년까지 목표
약 54만명	8만(정부지원)	14만(정부지원)

- 시장 참여형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개발 확대
 - 전통공예상품 사업단 등 지역적 특성과 노인의 경험 활용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사업단 구성·운영에 관한 컨설팅
 - 민간·공공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시험감독관, 전기검침원, 주유원 등 인력파견 형태의 일자리 개발(2006년 2만개)
 - 시니어클럽 증설(37개소 → 60개소), 시장참여형 사업기관에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

적인 노인일자리 확대

-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프라 확충
 - 지역내 노인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는 시·군·구 전담인력 배치 추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평가·개발·정보제공 기능 강화
- 복지형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의 내실화
 - 단순노무형태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老-老케어 등 복지형 일자리 비율 확대를 통해 생산성 제고 (2006년 15% → 2009년 30%)
 - 복지형 일자리는 사업기간 신축적 운영으로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
 - 사업기간 연장(7개월 → 10개월) 및 지원단가 인상(20만원 → 30만원) 추진
-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일자리사업 성과 제고
 - 일자리사업 평가모델 개발 및 성과평가 실시
 - ※ “참여인원” 중심의 평가(2005) → “사업내용, 만족도” 중심의 평가(2006)
 -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및 우수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평가결과 우수한 경우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및 인프라 구축

1) 노인 요양보호 현황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증상 등 장기 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급격히 증가
- 요양보호노인(노인의 12.1%) : 2005년 53만명 → 2007년 58만명 → 2010년 65만명
- 현재 요양시설 3만명 입소, 재가서비스 4만명 지원
- ※ 차상위 저소득노인은 실비요양시설 이용가능(44~70만원, 5천명), 유료요양시설 이용시 약 150~200만원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 지속적인 시설신축 지원과 민간사업자 참여로 583개 시설에서 치매·증상 등 노인성질환 노인 35,000명이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무료		실비		유료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요양	2005	356	17,329	149	10,321	123	4,819	84	2,169
	2004	214	12,679	131	9,384	42	2,310	41	965
전문	2005	187	12,634	139	10,496	5	520	43	1,678
	2004	143	10,203	108	8,539	1	100	34	1,564
요양	2005	40	5,209	-	-	-	40	5,209	
전문	2004	25	3,633	-	-	-	25	3,633	
병원	2005	-	-	-	-	-	-	-	
계	2005	583	35,172	288	20,757	128	5,339	167	9,076
	2004	382	26,515	239	17,923	43	2,410	100	6,182

□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85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0,002명(정원기준)의 노인에게 각종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 시설	실비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시설
	시설수	정원				
시설후	2005	848	399	280	66	103
	2004	660	300	237	41	82
이용	2005	40,002	32,752	4,618	1,064	1,568
	2004	30,662	24,836	4,245	604	1,177

2)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및 인프라 구축

□ 제도도입 기반 구축

- 「노인수발보험법」제정 추진 (2008. 7. 시행, 2006년 국회통과 추진)
 - 수발신청대상, 수발보험료, 관리운영기관, 수발급여 종류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수발급여 신청자 :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자 중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사람
 - 수발서비스 종류 : 재가, 시설서비스
 - 급여 : 현물 및 현금 급여(일정요건을 갖춘 가족이나 이웃)
- 비용부담 : 정부지원, 수발보험료, 본인부담 (20%)
- 2008. 7월부터 단계적 실시 : 2008년 8만5천명 (증증) → 2010년 16만7천명 중간정도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제2차 시범사업 (2006. 4~2007. 6) 확대 실시
 - 공공부조대상자 이외 일반노인까지 포함하여 수가체계, 평가판정, 케어플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증 실시

- ※ 1차(2005.4~2006.3, 6개 시·군·구 공공부조 대상자 2,050명) → 2차(8개 시·군·구 일반노인 포함 5,200명)

- 제도의 재정안정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
 - 재정추계 모형 설계 및 서비스 유형별 적정수가 모형 개발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화 추진
 - 수발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인정 기준 마련

※ 수발요원 : 노인 등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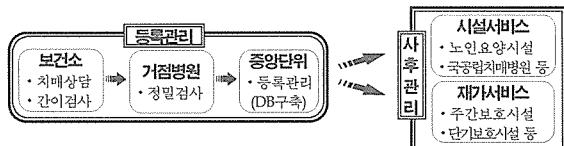
□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확충

- 2008년 '요양수요 100% 충족'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투자계획 수립
- ※ 2008년 목표 : 941개 시설(요양시설 862, 치매요양병원 79개소 등)
- 요양인프라 지속 확충(333개 신규, 2005년 538개 → 2006년 871개)
 - 요양시설(102개소), 공립치매병원(11개소), 노인 그룹홈(155개소),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65개소) 확충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질환노인 간병서비스) 확대
 - 질환노인에 대한 간병서비스 대상을 2배 이상으로 확대 추진
 - 이용대상 서비스 대상 확대 4만명(2006년) → 8만명(2007년)
- 치매 예방·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

치매노인 수 (2005)	2006년 목표
36만명(8.3%)	치매간이검사 2만명, 정밀검사 3천명(신규)

-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홍보대사 위촉, 학술대회 지원, 캠페인 활동 등 다각적 활동 전개
- ※ 일본은 '10년간 인지증 서포터즈 100만인 양성 추진'(2005년)
 - '치매예방 지침서'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치매 환자 가족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 치매노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공립 치매병원 확충
 - 차상위 중증 치매 노인(22천명)에게 재가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돌보미 바우처 제공(2007년)
 - 실비입소시설에 입소할 경우(6천명)에는 이용료(전문요양 월 40만원, 요양 월 25만원)를 지원 추진(2007년)

-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 치매병원 확충(2006년 5개소 672병상)
- 중증 치매노인 등에 대한 재가 도우미 파견(2만명)
 - 치매환자 가족 등 비공식수발자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
- 치매 조기진단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치료 및 보호의 비용효과성 제고
- 치매 간이검사(2만명) 및 정밀 검사(3천명) 신규 실시(2006년)
 - ※ 2010년 치매예상 노인의 16%(7만1천명) 대상 정밀검사 실시
 - ※ 간이검사는 4~50대로 확대 실시
- 보건소 치매상담 센터에 상담 전담요원 확대 배치 추진
 - 전담요원 운영 38개소(2006년)
 - 지역단위의 치매 환자 등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다.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보장사업

1) 노인의 보건의료 실태

- 노인의 90.9%가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병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음.
- 주요 만성질환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관절염(43.1%)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은 고혈압(40.8%), 요통·좌골통(30.6%), 신경통(22.1%), 골다공증(18.9%), 백내장(18.1%), 소화성궤양(16.5%), 빈혈(15.9%), 당뇨병(13.8%), 디스크(12.6%) 등임.

- 노인의 치아우식증 유병율은 46.1%, 치주질환 유병율은 92.1%이며, 자연치아 수 28개 중 잔존 치아는 12.1개로 의치 필요자가 40.2%임 (200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2) 건강보장 사업

□ 노인 건강진단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차상위 저소득 노인 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 유질환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록관리, 요양시설·요양병원 연계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안과전문의가 없는 읍·면지역 기초생활보장 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노인건강진단사업과 연계 실시)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 무료검진 10,000명, 백내장 수술 1,500명, 망막 증 수술 100명

□ 노인 의치

- 다수의 결손치를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저작기능을 회복시켜 좀으로써 노후에 건강생활 을 영위하도록 할 필요

-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의치를 무료로 제공

- 2006년 9,000명 136억원 지원

※ 2002년 5천명→2003년 5천명→2004년 9천명→
2005년 9천명 →

라.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추진

1) 독거노인 현황

□ 노인 단독가구 지속적 증가

- 노인인구 중 노인단독가구 비율 51.2%

- 노인단독가구 : 140만가구(2003년) → 200만가구(2010년) → 250만가구(2015년)

□ 독거노인은 83만명 추정

- 기초수급자는 20~30%, 차상위는 4%~20%, 일반노인은 60~69%로 분포

- 기능제한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30%

□ 재가복지서비스가 기초수급자에 집중되고 있어, 차상위 독거노인은 서비스 사각지대

○ 노인복지관 등에서 단편적으로 안부전화, 식사 배달 서비스 제공

※ 2005년 현재 재가복지서비스 실시대상 노인 약 72천명

2)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지정(시·군·구별 1개소)·운영

- 활동에 제한이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확인 체계 구축 필요

- 노인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해소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가사지원), 주간·단기 보호시설(노인보호), 노인복지회관(무료급식), 재가노인복지협회(결연사업) 등

○ 1차 서비스 : 안부전화 및 안전 확인

○ 2차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 밀반찬, 야쿠르트 배달 등을 통해 직접안부 확인

□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노인주거개선 사업단 운영을 통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간단한 주거개선과 창문보온 및 동파방

지 등 겨울철 준비 지원

는 6조5,560억원(24.4%)

()안은 증가지수

마. 노인의 안전 및 권리 증진

1) 현황

- 노인에 대한 학대, 방임 등 사회문제화
- 민간 노인학대상담센터의 노인 상담사례(2003년도 3,179건 상담내용)

가해자	①아들 41.0%	②머느리 29.0%	③딸 8.7%	④배우자 8.0%	⑤기타 13.3%
학대유형	①방임 25.0%	②정서적 21.7%	③연아적 19.5%	④신체적 15.5%	⑤경제적 11.0%

□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사고발생 및 사고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급속한 고령사회 대비 매우 심각
 - 노인 사망자 : 1,578명(2001) → 1,596명(2002)
→ 1,707명(2003) → 1,730명(2004)
 - 총 사망자 : 8,097명(2001) → 7,090명(2002)
→ 7,212명(2003) → 6,563명(2004)
- ※ 200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당 43.0명으로 영국6.9명, 스웨덴 7.7명 등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사망률이 5배 이상 높음.

□ 예방적 건강활동 미흡

- 노인은 건강운동 등 질병예방을 통해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이나 사회적 환경 미흡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노인은 29.3%에 불과
- 전체의료비중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건강보험통계연보)
 - 1990년 총 진료비 2조2,198억원, 노인 진료비 2,391억원(8.2%)
 - 2005년 총 진료비 24조7968억원, 노인진료비

2) 노인안전 및 권리보호 정책

- 노인학대 방지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노인학대 상담 교육·홍보, 학대 사례집 발간 등 사업 실시
 - ※ 16개 시도별 노인학대예방센터는 2004년부터 운영 : 노인학대 예방 순회교육 및 거리캠페인 등 실시
 - ※ 노인학대 발생건수 : 2003. 3,107건 → 2005. 10,126건
 - 노인학대예방 특집방송 추진(아버지날 및 노인의 날 전후)
-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안전 강화
 - 고령친화적 도로 및 교통시설 확산
 - 고령자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 배려 및 보행환경 등 개선
 - ※ 제도적 방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 추진 중
 - 실버마크제 도입 등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경찰청)
 -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하여 노인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운동 전개
 - 1개 시·군·구에 1개 이상 교통안전봉사단 운영
 - ※ 2006. 3월 현재 125개 구성(노인 일자리사업 55개, 순수 노인자원봉사 70개)
 - 교통안전봉사단 활동
 - 노인이동이 많은 곳과 사고다발 지역에 노인보행자 안내
 - 주기적인 거리질서 캠페인 실시(경찰청과 공동)
 - 경찰청 등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실시

- 대한노인회 등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을 구성하여 교통취약지역의 노인 안전 보행 강화 및 교통 안전 교육 실시

□ 노인건강운동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증진 HUB 보건소 시범사업 운영
- 노인건강대학 운영 및 가정·경로당 등 방문 프로그램 개발·보급
- 건강보험의 노인생활운동 활성화
- 전국 227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이용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노인에게 방문서비스 제공 (2005년 37,347회 → 2006년 98,000회)
- 제1회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를 개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새로운 노인문화 창조 계기 마련
- 일시 : 9.20(수)~22(금) 3일간, 전라북도 전주시
- 종목 : 건강체조, 장수춤,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손쉬운 7개
- 실버용품 전시회, 실버 노래자랑 등 문화예술행사 병행 실시
- 참가인원 : 약 5,000명 (선수 2,000명, 부대행사 개최자·참가자 등)
- ※ 실무협의회 구성, 기본계획(3월) 및 세부계획(3~4월) 확정
- 시군구 및 시도별 지역 예선전(6~8월)을 거치도록 하여, 모든 노인이 평소에 건강운동을 생활화하도록 유도

바. 노인복지 질향상

- 노인복지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고령화 수준별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발전모델 개발
- 지역사회 유형별 노인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모델 제시
- 도시형, 농어촌형 및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초고령사회

- 지역사회 유형에 적합한 발전방향 제시
- 보건·복지, 주거·교통, 문화·체육, 고용·안전분야
- 노화종합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 노화관련 연구기능 강화 필요성 등 통합 연구소 설치 대안제시
- 노인복지 수요와 지방재정이 연계될 수 있는 노인복지 지방재정 배분방식 강구
-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정부의 노인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지자체 및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
- 「노인이 살기 좋은 우수지자체」: 시·도별 각 1개 지자체 선정
- 노후소득, 노인복지예산, 노인복지시설, 경로우대 등 계량평가
- 전국적 보급 확산이 가능한 우수 프로그램 선정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복지분야 포털컨텐츠 및 복지시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합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 국가복지정보 포털사이트 (<http://www.e-welfare.go.kr>)에 접속한 후 노인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용.(2006. 7. 1개통, 포털메뉴 별첨)
-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하여 2007년 상반기 활용가능

4. 고령친화산업 진흥

-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기반 조성
- 「고령친화산업진흥법령」제정 추진
- 품질우수 고령친화제품과 우수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기준 및 표시제도 마련 등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
(2005.11)

□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표준화 및 우수제품 표시
제도 도입

- 국가표준(KS) 확대 및 ISO 국제표준 활동 강화
- 우수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품질표시제도(인증
마크)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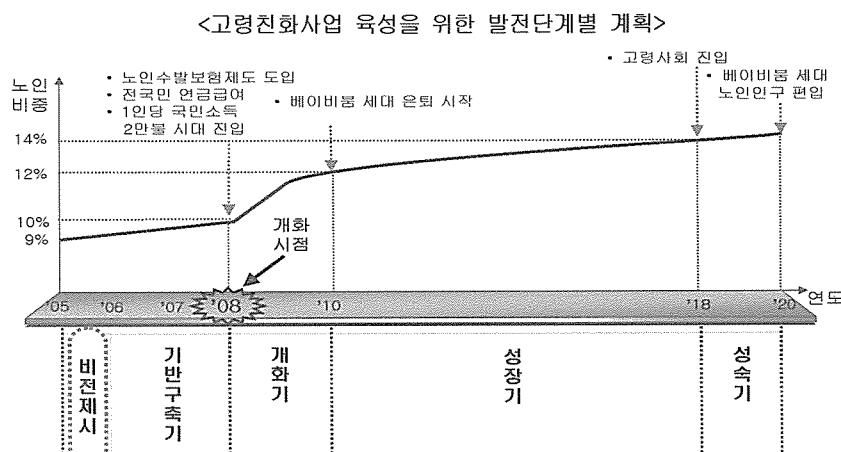
-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센터」(2005.10월 설

치)」기능 강화 및 지원센터의 추가 확대 검토

- 고령친화 유망분야 육성 및 체험관 설립 검토
- 8대 산업분야의 유망 전략품목(19개 품목) 집중
육성

※ 8대 산업분야 : 요양·주택·금융·기기·정보·여
가·한방·농업 등

-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체험관」 설치 타당성
분석 및 국내·외 실태조사 실시



※ 선진국의 경우에도, 고령친화산업의 본격적인 성장기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점

노인복지포털

건강생활 유지하기	일자리 알아보기	어가활동과 교육받기	일상생활 도움받기	노인시설 이용하기	알림방	함께하는 노인복지
장수생활 도우미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기	간병 가사지원 안내	노인복지시설이란?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지사항 복지뉴스	시설 노인요양전문인력
생활속의 건강관리	내게 맞는 취업정보 찾기	컴퓨터 배우기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안내	어떻게 이용하나요?	복지뉴스	노인요양전문인력
눈검사 및 개한수술지원	내가 만드는 일터	평생교육	돌로 사는 노인 지원 안내	우리지역 시설찾기	행사알림 행사알림	가정간호
치매예방 및 지원안내		가족교육 및 상담	경로연금 지급안내	노인관련단체	나도 한마디	노인실종자 찾아주기
실내용품 알아보기		자원봉사	경로우대제도 알아보기			장례정보
보건 의료기관 찾기		여가시간 100배 활용하기	노인수발보험 도입준비 안내			결연후원
			노인학대예방 안내			자료실